

북한 핵전략 및 핵태세 평가와 대응방안

김보미 (INSS)

1. 북한의 핵전략 및 핵태세

- 북한의 핵보유가 기정사실화된 이래 북한의 핵전략을 바라보는 시각은 최소 억제나 확증보복으로 좁혀져 왔음
 - 북한 스스로 밝힌 핵무기 개발 원인은 미국의 대북압살정책, 대북 적대시정책에 의한 것이고 따라서 대미 2차타격 능력확보가 북한이 달성해야 하는 최우선 과제로 논의
 - 2013년 4월 1일, 최고인민회의 법령 “자위적 핵보유국의 지위를 더욱 공고히 할 데 대하여”를 발표하고 핵무기 보유 목적을 보복용에 한정
 - * 법령 2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핵무력은 ...우리 공화국에 대한 침략과 공격을 억제, 격퇴하고 침략의 본거지들에 대한 침략의 본거지들에 대한 서멸적인 보복타격을 가하는데 복무한다.”
- 2017년 11월 29일, 신형 ICBM 화성-15형 시험 발사 이후 국가 핵무력 완성을 선언하였으나 이후 전술핵무기 개발에 주력하면서 핵전략 변화 가능성 대두
 - 신형 고체연료 미사일 3종 공개를 시작으로 다종의 단거리 미사일 개발
 - 2021년 1월, 8차 당대회에서 전술핵 개발 사실 인정 및 남한에 대한 핵무기 사용 가능성 언급
 - * 김여정, “우리와 군사적 대결을 선택하는 상황이 온다면 부득이 우리의 핵전투 무력은 자기의 임무를 수행해야 하게 될 것” (2022.4.4. 조선중앙통신 담화).
 - * 김정은, “어떤 세력이든 우리 국가의 근본리익을 침탈하려 든다면 우리 핵무력은 의외의 자기의 둘째가는 사명을 결단코 결행하지 않을 수 없을 것” (2022.4.25., 조선인민혁명군 90주년 기념 열병식 연설)
- 2022년 9월 8일, 14기 7차 최고인민회의에서 새로운 핵독트린으로 해석

가능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핵무력 정책에 대하여” 채택

- 핵무기의 사명, 핵무기의 사용조건, 지휘통제, NSA, 비확산 의무 등을 명시
- 앞서 7차 당대회(2016.5.)에서 핵선제불사용(No First Use)을 선언하였으나 이를 철폐한 것으로 보이며 2013년 채택한 “자위적 핵보유국의 지위를 더욱 공고히 할 데 대하여”에 대해서도 효력이 만료되었음을 선언
- 재래식 공격에 대해서도 핵무기를 선제적으로 사용하겠다는 입장을 반영하고 있으며 최근 몇 년간 전술핵무기 개발에 힘을 쏟은 점으로 볼 때, 대남 핵무기 사용 가능성 증가
- 이에 따라 핵무력 정책법의 발표는 핵태세의 변화를 확정하고 북한의 핵사용을 법적으로 뒷받침하려는 의도로 분석
-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국제사회로부터 핵보유국으로 인정받을 수 없으며 확증보복, 혹은 전범위억제 태세를 실현하기 위한 핵능력에 다가서지 못했음
 - 북한의 전술핵 사용을 위해서는 위임된 지휘통제체계로 전환되는 것이 바람직하나 핵무력 정책법 3조에 따르면 여전히 중앙집권적인 독단적 지휘통제체계를 유지
 - 정보부족으로 지휘통제체계(북한명 “핵방아쇠”)의 기술적 수준에 대한 판단은 어렵지만, 조기경보체계의 수준이나 PLA와 같은 우발적 사고를 막을 수 있는 통제장치 보유 여부 미확인
 - 전술핵무기에 탑재가능한 새로운 핵탄두 “화산-31”을 공개하였으나 8종의 각기 다른 미사일에 모두 적용 가능할 것인지 확인 불가
-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정은 정권은 핵태세와 핵능력을 일치시키려는 노력 계속
 -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지난해 가을부터 한미연합훈련에 대응한 북한의 강도 높은 도발로, 핵무기 사용 가능성 고조

- * 북한은 보통 한미연합훈련기간에는 위기고조 가능성을 우려하여 도발을 자제해 왔으나 한미연합훈련기간에 집중적으로 훈련을 실시하는 방향으로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는 바, 이는 “핵에는 핵으로, 정면대결에는 정면대결로”라는 원칙을 철저히 따르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이해
- 다른 하나는 북한의 지휘통제체계에 관한 것으로, 한미연합훈련 기간 북한의 군사도발 중에 거의 모든 자리에 김정은이 참석하였으며 그의 지도가 있었다는 것을 북한 매체에서 보도
 - * 9월 법령 발표 후 북한의 군사도발 현장에 김정은이 참석하였을 경우 그를 소개하는 표현은 “당 총비서,” “국무위원장”으로 단순화하였는데, 이는 법령 3조 1항에 핵무력에 대한 지휘권은 국무위원장에게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으로 추정
 - * 이전에는 “당 총비서,” “국무위원장”외에 “공화국 무력 최고사령관”이라는 지위가 추가되어 있었으나 김정은의 군 직책인 최고사령관은 더 이상 발견되지 않는데 이는 핵무기에 대한 지휘통제권한이 군에게 부여되지 않는다는 의미
- 지휘통제체계에 대한 모순을 우려한 듯, 위기시 신속한 핵무기 사용이 가능하도록 훈련을 실시하였음을 과시(2023.3.18.~3.19, 핵반격 가상 종합전술훈련)
 - 이를 통해 볼 때 북한은 지난해 발표한 핵무력 정책법에 모순되지 않도록 공세적 핵태세를 전개하기에 적합한 핵능력을 달성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으로 예상
 - 특히 올해는 국방과학발전 및 무기체계개발 5개년계획의 3년차로, 일정 정도 성과 도출이 필요한 시기이기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전망
 - * 최우선 5대 과업에서 제기한 목표들에 대한 중간 점검이 있을 것으로 추정
 - 또한 한미연합훈련을 민감하게 주시하면서 대응적 성격의 군사도발을 계속 이어나갈 것으로 예상
 - * 그러나 군사적 능력이라는 것은 보통 경제적 역량에 근거하기에 언제까지 북한이 맞대응할 수 있을 것인지 알 수 없음
 - * 당장 우리의 화력섬멸타격훈련에 대응하여 북한이 고강도 군사도발을 벌였어야 맞겠지만 지난해와 같이 건건이 대응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고 있음. 5월 31일에 최초의 군사정찰위성 만리경-1호 발사 실패가 맞대응 성격의 군사도발이었는지는 확인 불가

- 7차 핵실험의 경우, 새로운 핵탄두 ‘화산-31형’ 공개(2023.3.), 양산전 성능 확인을 위한 추가 핵실험에 대한 필요성은 인식하고 있을 것이나 국제사회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정치적으로 결단할 것으로 전망

2. 대응방안

- 우리 정부는 담대한 구상을 제안하고 새로운 통일방안을 모색하는 등 북핵문제의 외교적 해결방안 또한 탐색하고 있음에도 현재로선 북한의 호응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임
 - 북한은 대화와 협상 등 북핵문제에 대한 외교적 해결법을 찾기보다는 핵 보유국으로서의 지위 유지와 새로운 기술적 성공에 집착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비핵화를 전제로 한 대화 의사를 피력한다면 호응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준비 필요
- 우리는 대화뿐만 아니라 군사적 대비태세를 갖추는 데에도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이며 한미연합훈련의 정상화와 정례화를 통해 alliance commitment 강조할 필요
 - 확장억제의 정상적 작동 여부는 실제 핵전쟁이 일어나는 경우가 아니라면 한미동맹의 평시 운용을 통해 확인 가능
 - 북한이 평시 한미동맹이 정상적으로 기능하고 있음을 인지한다면 미국의 확장억제가 위기시에도 작동할 것이라는 생각을 갖게 될 것
 - 따라서 한미연합훈련의 정상화, 정례화는 한미동맹의 정상적 작동을 보여주는 하나의 신호이기 때문에 긴장관계가 심화된 현재는 협상의 대상이 되도록 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실시해나가는 것이 바람직
 - * 다만 우발적 사고에 의한 긴장 고조가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

//끝//